

전직 경제사령탑의 조언 &lt;금융&gt;

## 전광우 “과도한 기업 부채, 금융위기 재현될 수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금융위원장)

김소희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모두 경험한 민간 출신 금융 전문가다. 세계은행 근무 시절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23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998년부터 4명(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의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를 지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엔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후 신속·과감한 초기 대응을 선보이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후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글로벌 시장 ‘큰손’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

전 이사장은 3월 24일 ‘이코노미조선’과 전화 인터뷰에서 “위기의 파급력을 줄이기 위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의 주시해야 하는 지표로 기업 부채를 꼽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현재 금융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2008년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다.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가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크고, 그만큼 대책 또한 강력해야 한다.”

과거 금융위기로 미뤄보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지만,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초기 대응이 강력할수록 파장이 최소화한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도산 위기다. 금융시장을 비롯,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과한 통화 정책은 가계 부채 악화 기간 산업 지원으로 도산 막아야  
일본과 통화 스와프 회복 필요

전광우 서울대 경제학,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김흥구 객원기자

특히 예의 주시할 경제 지표가 있을까.

“세계적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 위기는 부채로부터 시작한다.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는 견지하되 무리한 팽창은 피해야 한다. 제로 금리로의 과도한 이행은 가계 부채가 악화할 소지가 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 상환 능력이 감소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 비우량채권과 같은 기업 부채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실채권(NPL) 비율 악화는 금융권 전반의 부실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200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용평가사가 올해 기업들

